

# 價値와 價格의 量的 聯關에 대한 檢討<sup>(1)</sup>

柳 東 民

이 글의 목적은 價値와 價格의 量的 聯關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을 것인가를 究明하는 데 있다. 특히 勞動時間·價値·價格이 자본주의적 생산이라는 하나의 현실을 상이한 각도에서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 세 범주간의 엄밀한 구분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리피에츠등에 의해 개발된 ‘勞動時間의 貨幣表現’이라는 개념을 ‘勞動時間의 價値表現’ 및 ‘價値의 貨幣表現’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분해하고, 價値와 價格의 量的 聯關은 노동력이라는 특수한 상품의 가치규정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음을 보인다. 이 경우 부문간에 잉여가치율이 균등화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개별 상품 수준에서 價値와 價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價値理論의 문제설정 자체가 勞動生産性과 所得分配의 상호관련 및 불균등전개과정을 제급대립의 결과로서 해석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분석결과가 價値理論의 불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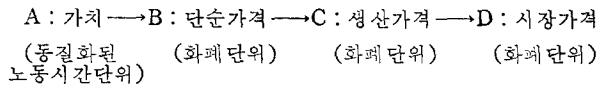
## 1. 問題提起

자본주의적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거래되는 모든 상품은 가격이라는 하나의 수치를 부여 받는다. 이러한 시장가격의 결정을 자명하게 주어진 사실로서만 받아들이는 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것의 規制要因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가치이론의 목표이다. 가격에는 실로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며, 그것들은 나름대로의 인과계열을 형성하고 있다. 예컨대 재화일반으로부터 소비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의 크기로부터 출발하여 가격으로 이어지는 계열이 있을 수도 있으며,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사회적 노동량으로부터 출발하는 인과계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인과계열 중에서 어느 하나를 特定化하여 가격형성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특정한 시각, 환언하면 경제학의 연구과제 및 범위의 설정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가치이론, 보다 정확하게는 노동가치이론의 유효성을 논증하는 작업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설정하는 연구대상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질을 얼마나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는가라는 점으로부터 찾아져야 한다. 물론 문제설정의 올바름이 이론의 논리적 엄밀성까지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특히 가치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그것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과는 어떤 관계를

(1)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1994)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뎡고 있는가라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생산된 생산물은 시장원리에 따라 교환되어야 하므로 그 크기는 일차적으로 貨幣單位로 표시되는 가격에 의해 측정된다. 가치이론에서는 바로 이 크기를 同質化된 勞動時間을 기준으로 삼는 새로운 원리에 의해 측정한다. 측정단위뿐만 아니라 그 원리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생산물이라 하더라도 두 체계 내에서 각각 다른 크기로 표현되며 양자를 직접 비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가치로부터 시장가격에 이르는 연관을 설정해주는 다양한 개념들의 논리적인 순서는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일반적으로 單純價格(B)은 가치크기에 정확하게 비례하는 가격으로 정의되므로 A→B의 과정에서는 측정단위만이 변화할 뿐 양적인 크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상정된다. 그러나 사실은 가치와 단순가격을 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불가능하다. 단순가격은 어디까지나 가격범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단순가격(B)이 부문간에 균등한 이윤율을 보장해주는 生産價格(C), 나아가 현실의 市場價格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양적인 크기는 두 번에 걸친 변화를 겪게 된다. 이 때 B, C, D는 모두 화폐단위로 측정되므로 양적 비교가 가능하다. 결국 가치가 시장가격으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모두 세 번에 걸친 전환을 필요로 하는데, 각각의 전환을 가져오는 契機들은 화폐의 매개(A→B), 부문간 유기적 구성의 격차 및 자본간 경쟁(B→C), 이윤율의 균등화를 저해하는 제요인 및 수요·공급의 일시적인 변동(C→D) 등이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것은 시장가격(D)뿐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순서 A→B→C→D는 현실적으로는 D→C→B→A일 수밖에 없다.<sup>(2)</sup> 이 때 가격범주(B, C, D)와 가치범주(A)를 동일한 차원에서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가능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자.

일반적으로 <그림 1>에서 A→B의 과정은 이론마 價値形態分析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단순가격은 가치공간 내에서 일정한 크기로 표현된 가치를 질적 변환을

(2) A→B→C→D의 과정을 역전시키는 것은 맑스의 경제학방법론과도 합치된다. 맑스는 구체로부터 추상으로서의 ‘調査’의 過程을 통해 가치 개념을 발견하고 이를 ‘ 발표 ’하는 과정에서는 가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나 가치와 가격의 양적 연관 자체를 해명하려는 현재의 시도에 서는 당연히 다시 한번 ‘ 조사 ’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통해 가격공간으로 옮겨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가치체제와 가격체제 간의 量的인 聯關은 가치형태분석을 통해서도 밝혀지지 않는다. 즉 A→B의 과정에서는 ‘가치가 왜 화폐형태를 띠게 되는가’라는 질적 연관에 덧붙여 양적 연관도 구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적 연관을 해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방법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먼저 생산가격(C)을 그에 상응하는 동질화된 노동시간(A)으로 환원하는 방법이다. 즉 생산가격을 가치공간 내의 크기로 변환시킨 뒤에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부문간 유기적 구성의 격차로 인해 발생한 변화를 제거할 수 없다는 난점에 직면한다. 어떤 상품의 생산가격을 가치공간 내의 일정한 크기로 ‘逆轉形’시키더라도, 그것은 예컨대 ‘생산가치’[정운영(1986)]등으로 불릴 수 있는 개념은 될지언정 가치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다음은 가치(A)를 화폐단위로 측정되는 단순가격(B)으로 바꾸어주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즉 가치와 생산가격이 공통적으로 화폐단위에 의해 표현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만약 商品貨幣를 상정한다면 첫째 방법과 유사한 난점에 직면하게 된다. 단순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화폐상품(예컨대 금)을 생산하는 부문의 유기적 구성의 영향을 차단해야 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전형을 겪는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유기적 구성이 화폐상품 생산부문의 유기적 구성과 같다는 보장이 없는 한, 단순가격의 크기를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물론 현대의 불환지폐제도 하에서 화폐가 상품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나 화폐가 상품인 경우를 사전적으로 배제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역사적으로도 실재한 바 있기 때문에, 가치이론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상품화폐가 존재하는 경우까지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두 가지 방법 중의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가치와 가격의 차원을 같도록 만들어 주는 순간 相對價値와 相對(生産)價格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어떤 제한적인 가정이 없다면 시장가격(D)으로부터 출발하여 가치(A) 또는 단순가격(B)의 크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글의 목적은 이상의 논의를 염두에 두면서 가치와 가격의 양적 연관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을 것인가를 구명하는 데에 있다. 먼저 2절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가치와 가격이 엄밀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범주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다음으로 3절에서 노동력 상품의 가치규정을 통해 가치체제와 가격체제의 연관이 확보될 수 있음을 보인 후에, 이러한 시도가 가치이론의 문제설정과 관련하여 갖는 의미를 음미하고자 한다.

## 2. 既存 論議의 檢討

가치이론의 연구동향은 먼저 가치가 생산영역에서만 배타적으로 결정되며 따라서 가격과는 독립적으로 측정가능한 개념이라는 사고로부터 가치크기의 결정은 생산 및 교환영역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사고, 나아가 가격 이전의 어떠한 가치실체도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져 왔다.<sup>(3)</sup> 이는 마치 효용가치이론이 기수적 효용 개념에서 출발하여 서수적 효용 개념으로 변형되고, 현시선호이론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가격을 효용에 의거하여 설명하려는 시도의 포기로 이어진 과정과 유사하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흐름 속에서도 <그림 1>에 제시된 네 가지 개념들간의 관계, 특히 그것들의 '次元'(dimension)<sup>(4)</sup>을 혼동하는 논의는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왔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야폐와 이체언의 주장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논자들 중에서 이들의 논의만을 취급하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가치이론사를 정리하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양자가 각각 가치이론을 옹호하는 주장 내부에서의 특징적인 입장을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야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정통파적인 방식으로 가치이론을 옹호하고 있다. 그는 생산가격체계가 가치체계와 동일한 차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Yaffe(1975, p.36)]. 즉 가치와 가격은 모두 동일한 실체인 人間勞動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양자가 모두 화폐가격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고 본다. 맑스가 『자본론』 제 3권에서 생산물의 비용가격에 해당하는 부분, 즉 불변자본 및 가변자본부분을 생산가격으로 전형시키지 않은 채 가치범으로 계산해줌으로써 이론바 轉形論爭이 야기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야폐에 따르면 이것은 맑스의 실수나 오류가 아니라 오히려 방법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절차라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제기되어온 '전형' 문제가 <그림 1>에서 B(단순가격)와 C(생산가격)간의 관련에 관한 문제라는 것은 분명하다. 즉 그것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A(가치)로부터 D(시장가격)로의 전형과정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B와 C가 동일한 차원 위에서 비교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로부터 가치(A)와 생산가격(C)이 동일한 차원을 가져야 하며 따라서 양적으로 직접 비교가능하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즉 야폐는 좁은 의미의 '전형'

(3) 주지하는 바와 같이 De Vroey(1986)는 이러한 경향들을 각각 '투하노동적 접근', '추상노동적 접근', '이단적 접근'으로 명명한 바 있다.

(4) 경제이론에 있어 '차원' 개념이 갖는 의의에 관해서는 曹謙(1982)를 참조하라.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가치(A)와 단순가격(B) 간의 양적 연관에 대한 일정한 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가격의 궁극적인 실체가 인간의 노동이라는 것은 가치이론의 기본적인 입각점이지만, 이를 확인하는 것과 가치-가격의 양적 연관을 검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가격이 아무런 매개 없이 노동시간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역으로 가치가 화폐단위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라면, 가치와 가격의 관계가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맑스의 말대로 본질과 현상이 일치하는 상황에서는 과학은 불필요하게 될 따름이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다.

한편 야페의 주장은 가치이론사 내부에서는 분명히 다른 흐름에 속한다고 간주할 수 있는 이체언의 논의[Lee(1993)]에서도 상이한 형태로 계승된다. 그는 가치체계와 생산가격체계를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단  $\lambda, p, A, d, l, e, \pi$ 는 각각 價値벡터, 生産價格벡터, 投入係數行列, 勞動投入單位當 貨金財벡터, 勞動投入係數벡터, 剩餘價値率, (價値)利潤率을 나타낸다.

$$(2.1) \quad \lambda = pA + (1+e)pdl,$$

$$(2.2) \quad p = (1+\pi)\{(pA) + (pdl)\}.$$

(2.1)에서 좌변의 가치벡터는 상품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추상노동의 양으로 측정되고 있음에 반해, 우변의 항들은 생산가격으로 측정되고 있다. 즉 가치 자체가 이미 생산가격화되어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2.1)은 사실상 동어반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이한 차원에서 정의되며 양적으로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두 체계, 즉 가치체계와 가격(또는 생산가격)체계 간의 비교라는 문제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르트키비츠에 의해 동시에 성립할 수 없음이 증명된 바 있는 두 가지 總計一致의 命題, 즉 ‘總價値=總價格’과 ‘總剩餘價値=總利潤’은 자동적으로 성립한다.<sup>(5)</sup>

이체언은 마치 온도가 수은주의 높이에 의해 측정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가치도 화폐단위로 측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화폐단위로 측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정한 가치크기로부터의 괴리를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가치 개념 자체를 수정하고 있다. 즉 <그림 1>의 논리로 설명하자면, C에 대응되는 어떤 개념(C')을 가치라고 정의함으로써 A와 B의 양적 연관이라는 문제를 해소해 버리고 있는 것이다.

(5) 이체언에게 있어 개별 상품의 가치가  $a+b$ 와 같이 표현된다면, 생산가격은  $a+b'$ 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원래 전형문제는  $a+b$ 가  $a'+b'$ 로 바뀔 때  $\sum a + \sum b = \sum a' + \sum b'$  및  $\sum b = \sum b'$ 가 성립하는가라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체언의 경우  $a, b, b'$ 는 모두 화폐단위로 표현되므로 동질적인 양이며,  $\sum b = \sum b'$ 를 가정하면 자동적으로  $\sum a + \sum b = \sum a + \sum b'$ 가 성립한다.

### 3. 價値와 價格의 量的 聯關：勞動力 商品의 價値規定

우리는 가치와 가격의 양적 연관이 노동력 상품의 가치규정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제 이를 상세히 살펴보자. 노동력은 자본의 생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가격에 해당하는 범주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전형의 논리적인 순서는 勞動力의 價値→勞動力의 價格→市場賃金이 된다. 즉 <그림 1>에서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에는  $A \rightarrow B \rightarrow C \rightarrow D$ 로 설정되는 과정이 노동력 상품의 경우에는  $A \rightarrow B \rightarrow D$ 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작용하는 계기들 중에서 부분별 유기적 구성의 격차 및 이윤율 균등화를 저해하는 제요인 등은 노동력 상품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노동력 상품의 경우 가격공간 내에서는 단순가격 또는 시장가격으로서만 존재하므로  $D \rightarrow B \rightarrow A$ 의 역전형을 통해 가치로 환원시킬 수 있다. 맑스는 가치의 생산가격으로의 전형을 다루기 훨씬 이전인 『자본론』 제 1권 제 19장에서 노동력 가치(또는 가격)의 임금으로의 전형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노동력 상품의 가치와 그 형태(임금)의 연관은 제 1권의 분석수준( $A \rightarrow B \rightarrow D$ )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력의 경우는 그 가치와 시장가격 사이에 직접적인 양적 연관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맑스 자신의 생각과도 일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이 상품으로 거래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지만, 가치이론의 장점은 바로 이 사실을 천착한 데에 있다. 맑스가 搾取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핵심적인 논의는 노동과 노동력의 구분인데, 이러한 구분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는 노동력도 다른 일반적인 상품과 마찬가지로 상품인 이상 사용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와는 달리 노동력은 그 사용가치와 가치가 同質的이라는 점이다. 사실 노동력 상품론 그 자체는 전혀 특징적인 이론은 아니며, 오히려 노동력의 非商品的 性格을 강조한 데에 특징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노동력이 ‘特殊한 商品’이라고 할 때, 강조점은 ‘상품’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특수한’이라는 관형사에 두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치이론의 고유한 영역은 가치의 생산과 수취를 둘러싼 계급적 대립관계로 표현되는 자본주의적 노동과정에 관한 분석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노동력의 비상품적 성격을 명확하게 인식함으로써만 확보될 수 있는 영역이다.

가치와 가격은 동일한 물량체계를 상이한 원리에 의해 측정하는 두 가지 체계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 두 체계 내에서 각각 차지하는 양적 비중이 달라진다. 즉 상대가치와 상대가격이 다르다. 그런데 노동력의 경우는 이러한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력 가치규정을 통해 가치체제와 가격체제의 양적 연관을 확보할 수 있는 실마리가 주어진다.

노동력이 갖는 여러 가지 비상품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상품’으로 간주하는 것은, 그것이 가격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시장에서 교환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력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純生産物의 가치합계와 가격합계는 일치한다.<sup>(6)</sup> 이제 노동력 상품을 생산하는 가상적인 부문을 설정해 보자. 이 부문의 생산과정을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결합을 통한 생산으로 개념화할 수는 없으며, 예컨대 이윤율을 계산하거나 자본이동의 대상으로 선택될 수도 없다. 즉 이 부문의 생산물인 노동력은 모두 순생산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가치이론의 구성요건상 그 가치와 가격은 일치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자가 실제로 수취하는 화폐임금의 크기에 대응되는 가치량, 즉 抽象勞動의 양으로서 결정된다. 그런데 개별 구체노동이 어떠한 비율로 추상노동으로 환원되는가를 알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사회 내의 모든 구체노동시간에 평균적으로 얼마 만큼의 가격이 대응되는가<sup>(7)</sup>는 거시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노동력 가치는 정의상 바로 이 평균적인 노동시간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물론 구체노동시간이 평균적으로 얼마 만큼의 抽象勞動量에 대응되는가는 관측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때 구하는 노동력 가치는 일종의 추정치이다. 특히 자본축적의 진행에 따라 상대적 과잉인구가 창출된다는 맑스의 명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초과공급이 존재하는 것은 극히 일반적인 상황이 된다. 따라서 노동력 상품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와는 달리 시장청산을 실현하는 균형가격만이 가치대로의 교환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노동력의 가격은 정의상 가치크기에 엄밀하게 비례하는 單純價格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이 임금이 노동력 가치보다 먼저 결정된다는 논리가 순환논법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력 가치는 단순히 임금의 크기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으며, 경제 전체에서의 가치생산량을 참조로 해서만 구할 수 있다. 가령 노동력의 가격이 매우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력 가치는 심한 변동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다. 가치는 생산영역과 유통영역 간의 相互接合을 파악하기 위한 개념이다. 예컨대 총계일치의 명제는 이러한 상호접합을 특정한 형태로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치체제의 선형성은 교환과정에 대한 생산(노동)과정의 論理的 優位性으로

(6) 우리는 뒤메nil·리피에츠·폴리 등의 논의를 받아들여 총계일치명제는 총생산물이 아닌 순생산물에 관해서만 성립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Lipietz(1982)를 참조하라.

(7) 이것이 바로 리피에츠등이 말하는 ‘노동시간의 화폐표현’이다.

부터 도출된다. 이와 같은 접합의 양적 측면이 노동력 가치와 임금 간의 관계를 통해 파악될 수 있는 근거는 상품세계내에서 노동력이 차지하는 특수한 지위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노동력 가치를 임금제의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화폐임금률을 ‘노동시간의 화폐표현’으로 나누어 준 값에 의해 구하는 경우 이론적으로 새로운 효과가 발생한다. 노동력 가치를 임금제의 가치로 치환하는 전통적인 논의에서는 비임금제 부문의 생산조건의 변화는 노동력 가치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수정되어야 한다. 즉 ‘노동시간의 화폐표현’은 경제 전체의 노동시간 및 부가가치생산액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노동력 가치 및 잉여가치율은 해당 부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계급간 역관계 및 생산조건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sup>(8)</sup>

만약 이 때의 비임금제 부문이 奢侈財 部門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맑스는 “필요한 생활수단을 공급하지도 않으며 그것의 생산을 위한 생산수단을 공급하지도 않는 생산부문들”에서의 노동생산성 증대는 노동력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였다[Marx(1989, p. 403)]. 그러나 우리의 논의에 따르면 사치재 부문의 노동생산성 증대는 노동시간의 화폐표현을 상승시키며 그 결과 다른 부문들의 노동력 가치도 하락한다. 이를 사치재 부문의 생산조건도 일반적 이윤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맑스의 논의와 비교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산업 간의 投入產出關聯을 중시하는 스타파적인 논의에서는 사치재는 다른 어떤 상품의 생산에도 투입되지 않으므로 일반적 이윤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맑스의 가치이론에서는 사치재 산업의 잉여가치량 증대는 경제 전체의 이윤율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 즉 맑스는 여기에서 투입산출관련과는 다른 회로를 상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본-노동의 계급간 剩餘價值生産이라는 관점이다. 그런데 우리의 주장은 이러한 관점과도 부합된다. 즉 임금상승을 수반하지 않는 사치재 산업의 노동생산성 증대는 해당 부문의 잉여가치율을 상승시키며, 다른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 이는 사회 전체의 잉여가치율을 상승시킨다. 만약 맑스가 생각한 바대로 잉여가치율의 균등화 경향이 작용한다면 다른 부문들의 잉여가치율도 상승해야 한다. 그런데 사치재 산업 이외의 부문들에서는 노동생산성이 불변이므로 가치생산량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잉여가치율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가치가 하락하는 수밖에 없다. 물론 이 때의 노동력 가치하락이 해당 부문들의 임금인하라는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생산과정 내에서의 계급대립을 통해 가치량과 노동력 가치가 동시에 확정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분석의 초점을 해당부문의 개별 생산과정으로만

(8) 필자는 줄고(1993)에서 간단한 숫자예로 이를 보인 바 있다.



국한시키는 것은 아니다. 개별 부문의 잉여가치율은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가치 및 잉여 가치생산과정에서 의해서도 규정된다는 의미에서 階級對立의 論理的 先行性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노동력 가치를 구하고 나면 각 부문의 가치생산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잉여가치율의 크기를 알아야 한다. 만약 부문간에 잉여가치율이 균등화된다면, (10) 화폐임금으로부터 계산된 노동력 가치에 대해  $1+e$ 를 곱함으로써 해당 부문의 가치창조량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잉여가치율이 균등화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방법은 적용될 수 없으며, 部門別 剩餘價値率( $e_i$ )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잉여가치율이 균등화된다고 가정함으로써 개별 부문의 가치를 계산해내거나, 잉여가치율의 부문간 격차를 인정한 위에서 부문별 노동력 가치의 시간에 따른 추이를 검토하는 두 가지 대안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전형' 문제를 잉여가치율이 균등화되는 상태에서 가치체계와 생산가격체계의 양립가능성이라는 좁은 의미로 이해할 때 우리는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특히 가치관계의 시간에 걸친 변화를 고려할 때에는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의 논의를 앞에서 지적한 차원(dimension)의 문제와 관련하여 분석해 보자. 맑스는 분명히 가치크기를 '노동시간'에 의해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이 때의 '시간'은 달력의 시간(calendar time)일 수는 없다. 왜냐 하면 추상노동은 실제하는 다양한 구체노동들의 공통적인 속성을 추상한 개념이므로 시간차원을 갖는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론』에 등장하는 시간으로 표현된 여러 가지 숫자예들(예컨대 필요노동시간과 잉여노동시간의 구분)은 교육적인 의미만을 갖는 은유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 平均的인 還元係數를 갖는 부문(또는 勞動類型)이 실제한다면 그것을 척도로 삼으면 될 것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격체계로부터 어떤 조건을 끌어오지 않는 한, 그런 평균적인 부문(또는 노동유형)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Brody(1970)의 제안에 따라 가치의 차원을 우회적인 방식으로  $[v]$ 라고 정의함으로써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먼저 집계치로 보면 사회 전체의 총노동시간( $\sum m_i$ )/순생산물의 총가치(=추상노동의 총량= $\sum v_i$ )/순생산물의 총가격( $\sum p_i$ )의 3자는 차원만 적절

(9) 흔히 생각되는 것과는 달리 잉여가치율이 균등화될 때에만 계급대립의 사회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별다른 검토 없이 잉여가치율의 균등화를 전제하는 것은 목적론적인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10) 이 경우에는 경제 전체의 임금총액과 이윤총액의 비율을 통해 잉여가치율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총계일치의 명제에 의해 이윤총액은 잉여가치의 합계와 일치하며, 임금총액은 노동력 가치의 합계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하게 조정해 주면 일치하여야 한다. 각각은 物量體系/價値體系/價格體系에 속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경제라는 동일한 현실을 서로 다른 세 가지의 각도에서 포착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sum m_i$ 는 작업중의 손실시간이나 식사 및 휴식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의 노동량을 人時 (man-hour) 단위로 측정한 것이어야 한다.<sup>(11)</sup> 이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괄호안은 각 변수의 차원을 나타낸다.

$$\sum m_i([\text{시간}]) \xrightarrow{\text{①}} \sum v_i([\text{v}]) \xrightarrow{\text{②}} \sum p_i([\text{원}])$$

〈그림 2〉

①의 과정에서는 [v/시간]의 차원을 갖는 대개변수를 곱해 주어야 한다. 이를  $\alpha$ 라 하면  $\alpha$ 는 한 시간의 구체노동이 평균적으로 얼마 만큼의 추상노동량(가치량)과 등치되는가를 표현한다. 따라서  $(\sum m_i)\alpha = \sum v_i$ 이다. 이 때의  $\alpha$ 를 ‘勞動時間의 價値表現’이라 부를 수 있다.

②의 과정에서는 [원/v]의 차원을 갖는 대개변수를 곱해 주어야 한다. 이를  $E'$ 라 하면  $E'$ 는 한 단위의 추상노동이 얼마 만큼의 화폐량과 등치되는가를 표현한다. 즉  $E'$ 는 ‘價値의 貨幣表現’이라 부를 수 있다. 따라서  $(\sum v_i)E' = \sum p_i$ 이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sum p_i = (\sum v_i)E' = (\alpha \sum m_i)E'$ 가 성립하여야 한다. 즉 맑스의 총계일치 명제는  $\sum p_i = (\sum v_i)E'$ 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런데 리피에츠 등이 개발한 ‘勞動時間의 貨幣表現’( $m^0$ )은 총가격과 총노동시간을 직접 연결하는 개념이므로 [원/시간]의 차원을 갖는다. 또한 위의 관계로부터  $\sum p_i / \sum m_i = \alpha E'$ 이므로  $m^0 = \alpha E'$ 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alpha$ 와  $E'$ 의 크기는 식별할 수 없지만  $m^0$ 의 크기는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순생산물의 총가치=순생산물의 총생산가격’은  $\sum p_i = (\sum v_i)E'$ 인데, 리피에츠등은 이를  $\sum p_i = (\sum m_i)m^0$ 의 형태로 바꾸어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sum v_i$ 와  $E'$ 가 현실적으로 식별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채택하는  $m^0=1$ 이라는 가정은 ‘1노동시간=1원’임을 의미하는데, 이는 암묵적으로 1노동시간이 가치 한 단위에 해당한다는 가정인 셈이다. 이러한 가정은 가치의 절대적인 수준을 확정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을 갖지만, 사실상 ‘가치’ 차원을 배제하는 문제점을 갖는다.

어떤 주어진 시점에서 상품의 가치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치’의 절대적인 척도에 대한 가정, 대개  $\alpha=1$ 이라는 가정이 불가피하다. 그러한 가정 하에서 계산된 노동력 가치는 다른 상품들의 집합 전체의 가치크기에 대한 노동력 상품의 가치크기의 비율이라 이

(11) 시간제 고용형태가 아니라면 이 때의  $m_i$ 는 구매된 노동력의 양과는 다를 수 있다. 사실 양자의 차이를 긴장하는 손실시간 및 휴식시간을 최소한도로 축소하려는 것은 자본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주어진 시점에서 양자간에는 일정한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기에 식은 이 관계를 그러하지 않는다.

해할 수 있다. 반면 가치관계의 시간에 걸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에서는  $\alpha$ 의 크기 자체가 변화한다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時點 間に 價値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상대적인 비율로서의 노동력 가치의 趨勢, 따라서 잉여가치율의 추세는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노동 한 시간이 표현하는 가치(또는 추상노동)의 양( $\alpha$ )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alpha$ 는 勞動生産性的 增加函數라고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각 부분의 노동생산성은 불균등하게 발전하므로 각 구체노동의 추상노동으로의 환원계수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alpha$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熟練·勞動強度 등의 여러 가지가 포함되지만, 거시적인 수준에서 상이한 두 시점을 비교하는 경우라면 핵심적인 요인은 노동생산성의 변화라고 놓을 수 있다. 가치이론의 연구대상 그 자체가 자본축적과정에서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가 맺는 상호관련을 검토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Roemer(1978)는 노동생산성과 무관한 差別化要因으로 인한 잉여가치율의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될 수도 있음을 입증한 바 있다. 그런데 로우머의 분석은 암묵적으로 노동자 개개인에 대해 잉여가치율을 계산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性)이나 인종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한 잉여가치율의 격차는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어차피 개별 노동자에 관해 잉여가치율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초과착취당하는 특정 집단의 노동자들이 경제 내의 각 생산부문에 배분되어 있는 비율은 일정 기간 동안에는 안정적이라고 상징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제 노동력 가치를 화폐임금으로부터 역산할 수 있다는 본질의 논의를 정확하게 규정해보자.  $m, w_i$ 를 貨幣賃金 支拂額이라 할 때 노동력 가치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m, w_i / E'$ 이다. 그런데  $m, w_i / E' = m, w_i / (m^0 / \alpha) = (m, w_i / m^0) \alpha$ 이다. 여기에서  $\alpha$ 의 크기는 확인할 수 없지만 주어진 시점에서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 즉 노동력 가치는  $(m, w_i / m^0) \times$ (상수)이며  $[v]$ 의 차원을 갖는다.

$$(3.1) \quad v_i = m, w_i / E' = m, w_i / (m^0 / \alpha) = (m, w_i / m^0) \alpha.$$

리피에츠동의 계산방식에 따르면, 명목임금상승률과 노동시간의 화폐표현의 증가율이 동일하기만 하다면 노동력 가치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셈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노동력 가치 그 자체가 아니라, 노동력 상품과 다른 모든 일반적인 상품집합 전체의 價値比率이라 할 수 있다. 즉 賃金-利潤 分配比率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며, 이는 경제 전체의 수준에서는 剩餘價値率이 일정하게 유지됨을 의미한다.

다. 그러나 설사 이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 영향은 부문별로 불균등하게 작용한다. 모든 부문이 동질적인 노동을 고용하는 것이 아닌 한, 임금률 및 노동력 가치는 서로 달라진다. 이렇게 달라지는 부문별 노동력 가치(따라서 잉여가치율)의 추세를 포섭할 수 없다면 가치이론의 존재의의는 소멸될 것이다. 잉여가치율의 크기가 의미를 갖는 것은 경제 전체의 수준에서뿐이라는 주장[Dostaler(1982)]은 사실상 임금-이윤 비율과 일치하게 되는 잉여가치율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어떤 분석상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게 된다.

이제 個別部門의 剩餘價値率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단  $V_i$ ,  $S_i$ 는 각각  $i$ 부문의 가변자본 및 잉여가치의 양,  $\alpha_i$ 는  $i$ 부문의 환원계수이며  $m_i$ 는  $i$ 부문의 노동시간이다.

$$\begin{aligned}
 (3.2) \quad e_i &= S_i / V_i \\
 &= (\alpha_i m_i - m_i w_i / E') / (m_i w_i / E') \\
 &= (\alpha_i m_i) / (m_i w_i / E') - 1 \\
 &= (\alpha_i m_i) / (m_i w_i / m^0) \alpha - 1 \\
 &= \alpha_i m^0 / w_i \alpha - 1.
 \end{al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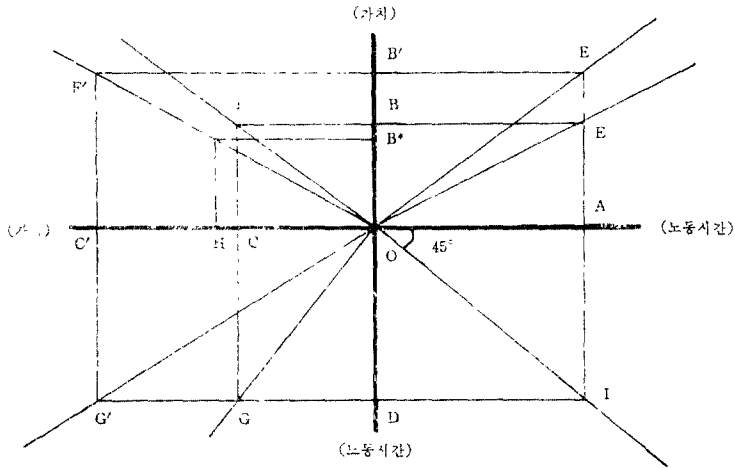
따라서 노동력 가치에 대한 전체 가치생산물의 비율, 즉  $1+e_i$ 의 변화율은 (3.2)의 우변의 첫번째 항의 변화율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즉

$$\begin{aligned}
 (3.3) \quad & (\alpha_i^* / \alpha_i) - (\alpha^* / \alpha) - (w_i^* / w_i) + (m^0^* / m^0) \\
 & = [(\alpha_i^* / \alpha_i) - (\alpha^* / \alpha)] - [(w_i^* / w_i) - (m^0^* / m^0)].
 \end{aligned}$$

단, 상첨자 \*는 해당 변수의 시간에 걸친 변화율을 의미한다.

노동강도의 문제를 사상하면 (3.3)의 첫번째 항은 사회 전체의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해당부문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의 격차에 의존한다. 즉 평균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라면 잉여가치율의 변동 방향은 노동시간의 화폐표현의 변화율과 임금상승률 간의 격차에 의존한다. 만약 평균 이상으로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부문이라면,  $(\alpha_i^* / \alpha_i) - (\alpha^* / \alpha) > 0$ 이므로  $(w_i^* / w_i) - (m^0^* / m^0) > 0$ 이라 해도 잉여가치율은 상승할 수 있다. 즉 노동력 가치의 상대적인 상승과 잉여가치율의 상승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평균 이하로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부문에서는  $(\alpha_i^* / \alpha_i) - (\alpha^* / \alpha) < 0$ 이므로 노동력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조차 잉여가치율은 하락할 수 있다.

한편  $\alpha$ 가 상승한다는 것이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의 감소경향이라는 자본축적의 경향과 모순되는 것은 아님에 주목하자.  $\alpha$ 의 상승은 노동생산성의 발전과 더불어 단위시간당 창출되



〈그림 3〉

는 가치량, 즉 流量(flow)으로서의 가치가 증가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E'의 증가로 말미암아 개별 상품 한 단위에 체화되는 가치량은 감소한다. 이 때의 가치량은 일종의 貯量(stock)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결국 잉여가치율이 균등화되지 않는 일반적인 상태에서 가치분석은 절대적 가치량의 시점간 비교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alpha$ 의 변화에 따른 部門別 價値形成能力 格差의 추이를 연구하는 문제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그림 3〉을 통해 확인해 보자. 제 1 사분면에서 주어진 시점의 경제 전체의 총 노동시간 OA는 일정량의 가치 OB를 생산하며 이는 시장에서 OC의 가격으로 실현된다. 물론 OB 및 OC는 총생산물이 아니라 순생산물에 관해 적용된다. 한편 제 4 사분면에서는 정의상  $OA=OD$ 이기 때문에 직선 OI가 가로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는  $45^\circ$ 이다.

먼저 1사분면의 직선 OE의 기울기(= $OB/OA$ )는 1노동시간이 얼마의 가치를 생산하는가를 나타낸다. 즉 '勞動時間의 價値表現'( $\alpha$ )이 커질수록 직선 OE의 기울기는 급해진다. 2 사분면의 직선 OF의 기울기(= $OB/OC$ )는 '價値의 貨幣表現'의 역수에 의존한다. 즉 가치의 화폐표현이 커질수록 그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따라서 노동시간-가치-가격의 연관은 1 사분면 및 2사분면의 그림에 의해 완전하게 분석된다. 그러나  $\alpha$ 와 E'의 값이 관측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리피에즈등은 가격의 합과 노동시간의 합을 직접 연결지운다(제 3 사분면). 즉 '勞動時間의 貨幣表現'( $m^0$ )의 크기가 직선 OG의 기울기를 결정한다. 그러나 3사분면만 분석하는 것은 1,2사분면이 포함하는 내용을 간과하게 만드는데, 대표적인 것은 實質勞動의 同質勞動으로의 환원문제를 생각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 따라서 부문



그런데 기하학적인 성질로부터 OA-OB-OC경제에서 순생산물의 총가치(OB)에 대한 노동력 가치(OJ)의 비율(OJ/OB)은 OL/OE=OM/OA와 같다. 한편 OA-OB'-OC'경제에서 순생산물의 총가치는 OB', 노동력 가치는 OJ'이므로 이 비율은 OJ'/OB'가 되고 이는 OL'/OE'=OM'/OA와 같다. 즉 이 비율은 경제 상태의 변화과정에서 OM/OA으로부터 OM'/OA로 감소한 것이다. 결국 리퍼에츠등이 말하는 노동력 가치는 정확하게는 이 비율을 의미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앞에서 이를 노동력 가치의 추정치라고 부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 4. 結 論

이제 가치체제와 가격체제를 다음과 같이 정식화할 수 있다.

먼저 價値體系는  $v=vA+l$ 인데 여기에서  $l$ 은 추상노동량을 나타내므로  $[v/i]$ 의 차원을 갖는다. 여기에서  $[i]$ 는 상품  $i$ 의 실물적인 측정단위를 나타낸다. 또한 상품 단위당 노동력 가치를  $W^*$ 라 할 때  $l=mW^*(I+E)=(mW/m^0)\alpha(I+E)$ 이다. 결국 가치체제는 다음과 같다.

$$(4.1) \quad v=vA+l=vA+mW^*(I+E)=vA+(mW/m^0)\alpha(I+E).$$

(4.1)에서  $l$ 은 이질노동을 동질노동으로 환원한 결과로서 얻어지는 추상노동량의 벡터로서 가변자본과 잉여가치의 합계에 해당된다.  $m$ 은 자본가가 실제로 구매하는 노동량을 나타내는 벡터이므로, 노동자에게 지불되는 뭇은  $mW^*$ 가 된다.  $W^*$ 는 각 부문별 노동력 가치( $w_i^*$ )를 주대각원으로 하는 對角行列이다. 또한  $E$ 는 부문별 잉여가치율( $e_i$ )을 주대각원으로 하는 대각행렬이다.

한편 價格體系는 다음과 같다.

$$(4.2) \quad p=(pA+mW)(I+R).$$

(4.2)에서의 가격벡터( $p$ )는 이윤을 균등화를 전제로 하는 생산가격이 아니라 시장에서 관측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R$ 은 각 부문별 이윤율( $r_i$ )을 주대각원으로 하는 대각행렬이다. 아울러 임금률 균등화도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W$ 는 스칼라가 아니라 부문별 임금률( $w_i$ )을 주대각원으로 하는 대각행렬이다.

(4.1)에서 次元의 一貫性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m$ 의 각 원소는 상품단위당 구제노동의 지출량을 나타내므로 [시간/ $i$ ]의 차원을 가지며,  $W$ 는 시간당 임금률이므로 [원/시간]의 차원,  $\alpha$ 는  $[v/\text{시간}]$ 의 차원을 갖는다. 따라서 우변의 두번

책 식에서  $(mW/m^0)\alpha$ 는  $\{([시간/i] \times [원/시간]/[원/시간]) \times [v/시간] = [v/i]$ 의 차원을 갖는 것이다.

한편 (4.1) 및 (4.2)에 기초하여 생산의 기술적 조건 및 실질임금률에 관한 데이터만 주어지면 가치체계에 관한 지식이 없이도 상대가격과 이윤율을 구할 수 있다는 신리카도학파의 비판을 반박할 수 있다. 생산과정 내에서의 계급대립의 결과로서 잉여가치율의 부문별 구조( $E$ )가 결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추상노동량( $I$ )과 실제로 구매되는 노동량( $m$ ) 간의 관계가 확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4.1)의 양변에  $m^0$ 을 곱해 주고 정리하면,

$$(4.3) \quad mW = (1/\alpha)m^0v(I-A)(I+E)^{-1}.$$

한편 (4.2)를 변형하면,

$$(4.4) \quad mW = p[I-A(I+R)](I+R)^{-1}.$$

(4.3)과 (4.4)를 등치시키면,

$$(1/\alpha)m^0v(I-A)(I+E)^{-1} = p[I-A(I+R)](I+R)^{-1}.$$

따라서 다음을 얻는다.

$$(4.5) \quad v = (\alpha/m^0)p[I-A(I+R)](I+R)^{-1}(I+E)(I-A)^{-1}.$$

잉여가치율 균등화의 가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는 이 식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즉 잉여가치율이 부문간에 균등화된다면  $I+E = (1+e)I$ 가 되므로 (4.5)는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4.6) \quad v = [\alpha(1+e)/m^0]p[I-A(I+R)](I+R)^{-1}(I-A)^{-1}.$$

그런데 수정된 총계일치의 명제로부터  $\sum V_i = \sum V_i'$ ,  $\sum S_i = \sum S_i'$ 이므로  $e$ 의 값은 쉽게 구할 수 있다. 단 변수 위의 '는 가격법으로 측정된 크기임을 의미한다. 즉 잉여가치율이 균등화할 때  $\alpha$ 의 크기는 일정하기 때문에 벡터  $v$ 의 구조(相對的인 價値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다 리피에즈등과 같이  $\alpha=1$ 이라는 가정이 추가되면 個別 商品의 價値벡터( $v$ )를 결정할 수 있다. 즉 잉여가치율 균등화조건은 가치체계와 가격체계를 개별상품의 수준에서 까지 양적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잉여가치율이 균등화되지 않는다면, (4.5)는  $2n$ 개의 미지수( $v_1, v_2, \dots, v_n, e_1, e_2, \dots, e_n$ )에 관한  $n$ 개의 식이므로 해를 구할 수 없다.

『자본론』 제 3권에서 제시된 '전형' 문제의 이론적 과제는 잉여가치율과 이윤율이 부문간



에 균등화되는 이상적인 상내에서의 均衡價格體系를 가치체계에 기초하여 구명하기 위한 것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가치와 시장가격 간의 연관을 설명하기 위한 체계인 (4.1)~(4.2)에서는 개별 상품 수준에서의 구체적인 연관은 파악되지 않는다. 이리한 사실로부터 가치이론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치이론의 문제설정 자체가 노동생산량과 소득분배의 相互聯關 및 不均等展開過程은 새급내립에 의해 해석하려는 데에 있으며, 균형가격의 설명은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1세기 위원회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산 산 3-25

전화 : (02) 732-0090

팩시 : (02) 732-9180

## 參 考 文 獻

- 류동민(1993): “가치크기 결정의 몇 가지 진세에 관하여,” 『사회경제평론』 6.
- \_\_\_\_\_ (1994): “가치이론의 정합성과 분석적 의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학위 논문.
- 정운영(1986): “상품과 가치: 단순상품생산에서의 가치의 형성,” 한신경제과학연구소 엮음.
- 한신경제과학연구소 엮음(1986): 『가치이론』, 까치.
- 置鹽信雄(1982): “經濟學における‘次元’の問題,” 『國民經濟雜誌』 146. 2.
- Brody, A.(1970): *Proportions, Prices and Planning: A Mathematical Restatement of the Labor Theory of Value*, North-Holland.
- De Vroey, M.(1986): “타르크스주의 가치이론에 대한 추상노동적 해석: 하나의 비판적 평가,” 정운영 역, 한신경제과학연구소 엮음(1986).
- Dostaler, G.(1982): “Marx’s Theory of Value and the Transformation Problem: Some Lessons from a Debate,” *Studies in Political Economy*, 9.
- Lee, C.O.(1993): “Marx’s Labour Theory of Value Revisited,”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7, 4.
- Lipietz, A.(1982): “The So-Called ‘Transformation Problem’ Revisited,” *Journal of Economic Theory*, 26, 1.
- Marx, K.(1989): 『자본론』 1,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 Roemer, J.E.(1978): “Differentially Exploited Workers: A Marxian Theory of Discrimination,”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10, 2.
- Yaffe, D.(1975): “Value and Price in Marx’s Capital,” *Revolutionary Communist*, 1.